

2024년 독일 노동시장 전망 : 현재의 마비 상태는 극복 가능한가?

Matthias Knuth (Research Fellow at Institute for Work, Skills and Training (IAQ),
University of Duisburg-Essen)

■ 2023년 경제 및 노동시장

유급고용

팬데믹 이후 2021년 6월부터 재개된 고용 성장은 2022년보다는 더디지만 2023년에도 지속되었다. 2023년 9월 취업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14년경부터 시작된 활발한 이민 유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치이다.¹⁾ 현재 독일에서 고용된 노동력 중 20%는 독일 태생이 아니며, 독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계절노동자는 위 수치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²⁾

2023년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처리되는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즉 경제 전체의 총노동시간으로 보는 일의 양은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 및 집단적으로 합의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를 전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자기강화(self-reinforcing)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병가율(sickness rate)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염병이 이전보다 더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되며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는 잦은 결근을 사유로 해고될 위험이 낮기 때

1) Knuth, M.(2019), 「독일 노동시장의 난민 통합」, 『국제노동브리프』, 17(2), pp.53~66.

2) Knuth, M.(2021),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독일로의 계절적 및 경기순환적 노동이주」, 『국제노동브리프』, 19(8), pp.79~94.

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고용 증가와 부가가치 침체 사이의 역설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부가가치와 인플레이션

2023년 GDP는 부진하여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약간 낮았으며 4분기에 이를 만회했다는 증거도 없다. 2022년에 실시한 기업 대상의 연례 대표조사에서는 기업의 절반가량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제재조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³⁾ 특히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처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우에는 더 그러했다. 이러한 가격 충격은 팬데믹의 제약에서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미 접수된 주문도 납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도 이러한 혼란은 2023년 내내 계속되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⁴⁾와 함께 일부 사회적 이전에 대해 별도의 개선책이 더해지면서 가계의 추가 부담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경우에는 초과 보상되기도 했다.⁵⁾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 충격과 보상금 지급 지연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에너지와 주거에 대한 추가 지출로 기타 개인소비지출이 다소 줄어들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2023년 4월 이후로 전년 수준을 밀돌고 있다. 하지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3년 9월까지의 수출 흑자는 전년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가격 충격에 뒤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기업 파산은 전년대비 23.4% 증가하여 2019년 수준에 이르렀다. 파산으로 인한 예상 실직건수는 2017년 및 2018년 수준이다.⁶⁾ 파산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는데, 정부 지원과 함께

3) Bennewitz, E. et al.(2023), "Auswirkungen des Angriffskrieges auf die Ukraine auf die Betriebe in Deutschland und weitere Ergebnisse des IAB-Betriebspanels 2022", <https://doku.iab.de/> (2024.1.2).

4) Knuth, M.(2023), 「독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그리고 전환」, 『국제노동브리프』, 21(2), pp.19~27.

5) Beznoska, M. et al.(2023), "Auswirkungen der Entlastungspakete in der Energiepreiskrise. Berechnungen für verschiedene Haushaltstypen und Einkommensklassen", <https://www.iwkoeln.de/> (2024.1.2).

6) Creditreform Wirtschaftsforschung(2023), "Insolvenzen in Deutschland", <https://www.>

파산 규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파산 건수가 더욱 크게 줄었다. 2022년 이후의 파산 상승세는 대출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피로도에 기인한다.

독일경제전문가협의회는 2023년 GDP가 0.4% 하락한 것으로 예상하며(1년 전 예측보다 2배 높은 수치) 그 원인을 세계 경제의 약세, 특히 성장 동력으로서 중국의 부진을 꼽고 있다. 연방 통계청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약간 하락하여 2023년 평균 5.9%로 예측된다.

실업과 단시간 노동

2023년 10월까지 공식 실업률은 2022년 연평균인 5.3%보다 소폭 상승한 평균 5.7%를 기록했다. 실업률 증가는 거의 외국인에 한정된 것으로 난민 지위에 관한 행정규정의 영향이 크다.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 전쟁 난민 유입이 두드러진다. 외국인 고용 수치는 이들의 노동시장 기회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23년 3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500만 명이 취업 상태였는데, 1년 전 460만 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실업자 증가분은 주로 최근에 입국한 난민으로서 높은 노동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시점에 80만 명이 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023년 여름 이후 약 15만 명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가을에 기업의 단시간 노동 사전 통지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수요와 노동력 부족

등록 구직자 1인당 구인건수는 2010년 6월 0.17에 불과했으나 2022년 6월에는 0.56으로 증가해 일자리 기회는 3배 이상 늘어났으며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⁷⁾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2022년 중반 이후 연방고용청에 신고된 구인건수

[creditreform.de/](https://www.creditreform.de/) (2024.1.2).

7) Bossler, M. and M. Popp(2023), "Arbeitsmarktanspannung aus beruflicher und regionaler Sicht: Die steigende Knappheit an Arbeitskräften bremst das Beschäftigungswachstum", <https://doku.iab.de/> (2024.1.2).

는 전년동기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규채용의 경우 2023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2% 줄었는데, 신고된 구인건의 공석 기간은 2023년 10월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즉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고용연구소가 발표하는 노동력 부족 지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보다 2023년이 더 높다.

이와 같이 노동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여전히 부족한 역설의 이면에는 2018~2021년 동안 20~66세 인구가 매년 감소했던 인구학적 추세가 있다. 2022년 약 50만 명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이민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이주한 잠재적 노동자 중 17%만이 일자리를 구했고, 많은 이들이 아직 언어를 배우는 중이라는 점이 원인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40%가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인 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편이 참전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부모인 상황으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 임금

최저임금

2022년 10월 1일 통상적인 절차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⁸⁾을 거치지 않고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는데,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15% 가까이 올라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동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임금보다 훨씬 뒤쳐진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는데, 이러한 대폭 인상은 그간의 간극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즉 최저임금이 단체협약 임금을 앞섰고 단체협약 임금과는 달리 실질임금인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에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 특히 2023년, 2024년 단체교섭 당사자들에게 옵션으로 지급될 세금 및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조정 상여금(최대 3천 유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⁹⁾

8) Knuth, M.(2019),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까? :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특징과 제도 변화의 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17(4), pp.35~50.

9) Börschlein, E-K. et al., Mit der Erhöhung auf 12 Euro liegt die Entwicklung des gesetzli-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단체교섭 제도 약화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문에서는 교섭 당사자들이 단체협약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교섭이 진행되어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높게 결정되기도 했다. 단체협약 임금구조는 상향 조정되었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하위 절반으로 압축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에 맞선 실질임금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최저임금 결정 절차로 복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계속해서 과거 단체협약 임금동향을 근거로 2024년 1월 1일과 2025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을 각각 0.41유로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모든 물가 전망에 비추어봤을 때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의 실질가치가 사실상 하락할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도입된 최저임금의 짧은 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대표들이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부동수인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대표도 위원장과 함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¹⁰⁾ 결과적으로 위원장 및 사용자대표의 찬성표가 앞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채택되었다.

단체협약 임금

노동조합연구소는 2023년 단체협약 임금인상률을 2022년의 2배가 넘는 5.6%로 잠정 추산했다. 그럼에도 지난 2년간의 실질임금 손실을 보완할 수준은 되지 못해 2023년에도 실질임금은 다시 소폭 하락한 셈이다. 하지만 이 계산은 월 총임금만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정 프리미엄의 총액만 포함되었다.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서 임금 조정 프리미엄이 면제되면 더 높은 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푸시업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부 부문에서 저임금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현상(상기 내용 참조)과 더불어, 조정 프리미엄의 고정금액은 저임금 집단이 고임금 집단보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chen Mindestlohns über der Tariflohn- und Preisentwicklung, 2023.12.11.

10) Knuth, M.(2019),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까? :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특징과 제도 변화의 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17(4), pp.35~50.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결과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의 상호작용은 임금 정책에 있어 강력한 연대 요소가 되었다.

연방통계국의 임금통계는 저소득층의 임금이 더 많이 증가한 효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은 2021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2분기와 3분기에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다.

■ 탈탄소화 프로세스 현황

현재까지의 상황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7%에서 2023년 52%로 증가한 반면 총소비량은 약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는 주로 풍력 발전이 주도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이 그 뒤를 잇는다. 수력 발전과 바이오 물질 및 가스는 대체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생산은 2023년 봄에 중단되어 2023년 전반에 걸쳐 그 비중이 2%에 못 미쳤다. 나머지 전력수요는 석탄과 가스 연소 및 수입으로 충당한다.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지만 2045년까지 법정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한 산업공정열과 건물 난방 등 열 생산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로, 공중 및 수상 이동수단도 여전히 주로 내연기관에 의존한다. 신규등록차량 중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은 2023년 여름에 구입 보조금이 축소된 이후 전년대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조금 제도가 발표된 바와 같이 예산 위기로 인해 조기에 폐지된다면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1일까지 승용차 중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2035년까지 자동차에서 신규 내연기관을 없애겠다는 EU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11) WSI, Jahresbilanz des WSI-Tarifarchivs: Tariflöhne steigen 2023 nominal um durchschnittlich 5,6 Prozent – Kaufkraft kann annähernd gesichert werden, 2023.12.7.

향후 예측

2021년 말 출범한 독일 정부의 핵심 목표는 경제 및 규제 체제를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관련 시설의 계획, 허가 및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러한 노력은 아직 전력생산수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상 발전량 기준으로 측정한 2023년 신규 육상 풍력 터빈 건설 승인건수는 2018년 이후 어느 해보다 높지만, 이전 최고 기록인 2014년 수준에는 아직 크게 미달한다. 현재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부지(예: 고속도로변)는 대부분 터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부품을 멀리 떨어져 있는 신규 부지로 운송하는 물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해상 풍력의 경우 계획부터 전력망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육상 풍력보다 훨씬 길다. 하지만 독일 연안의 비교적 얕은 바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초에 채택된 해상 풍력 규제 간소화에 따라 2030년까지 설치될 용량은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 에너지의 경우 2023년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용량이 추가될 것이다.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안팎에 설치된 분산형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기술 요건들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분산형 시스템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산자가 현장에서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분산화는 통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2024년 전망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GDP 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하여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와 같은 전통적인 성장지표의 의미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후중립경제에 필요한 광범위한 인프라 재편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는 더 “친환경적인(greener)” 방식으로만 성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탈성장(degrowth)”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DP가 감소해야만 자원 소비가 제한될 수 있는가? 노동력이 감소하는 추세인 독일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다. 경기침체 또는 점진적인 경제 생산량 감소가 실업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생산량이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은 늘어나는 초고령자가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너무 적은 수의 어린이와 청년이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교량을 재건할 수도, 주택 부족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의 양적 정체가 질적 정체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일은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이민 유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주택 부족, 교육 시스템의 병목 현상, 이민자 관리로 인한 과도한 공공행정 부담, 그리고 2023년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재정 지출 분배를 둘러싼 연방, 주, 지방 정부 사이의 공공분쟁 등으로 인해 이민 유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낮아지고 있다. 2024년 구 동독 3개 주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상당한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들은 이민 유입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설명할 용기가 부족하다. 오히려 소심하게 난민의 독일 이주를 막고, 대신 “숙련노동 이민”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이민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해외에서 독일어를 잘 알지 못하면 행정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망명 이민은 망명자가 우선 독일에 입국하여 자원봉사자 및 상담센터와 접촉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점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일부 정치인이 이탈리아와 영국의 사례를 따라 망명절차를 제3국이나 EU 외부 국경에 있는 가상의 치외법권 수용소에 아웃소싱함으로써 막고자 하는 부분이다. 2023년 12월 20일 EU는 난민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조치에 합의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세력이 우세하게 된다면 이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다름없다. **KLI**